

2020.6.13.

정은령(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장)

김수아 선생님의 연구는 언제나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도 좋은 발표문을 읽었고, 이 발표문이 또하나의 좋은 논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제가 내내 한 생각은 이 논의가 과연 어떻게 현장에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였습니다. 그만큼 연구와 실천의 사이가 가까울 수밖에 없고, 가까워야 하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보도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계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 가운데 변화의 확산을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해줄 수 있는 유관기관들은 어떤 곳이 있으며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학계는 변화를 위한 토대지식들을 좀 더 현장 적용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고, 현장에 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아 선생님의 발표문 서두에 보면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구분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사실 저도 이 발표문을 읽기 전까지는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다른 맥락들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론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어떤 사안을 어떤 단어로 호명하게 되는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줄의 헤드라인, 기사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사회적 습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이 정확한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구를 토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들을 사건이 보도되고 있는 와중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에게 이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자료들이 축적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가 ‘성폭력 성희롱 사건 보도 공감기준’을 만든 것이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때 추상적이기는 하나 의미 있는 지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Women’s Media Center에서는 올 1월에 ‘미투 시대에 어떻게 성폭력을 보도할 것인가, 10개의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할 일(How to report on sexualized violence in the #MeToo era:10 do’s and don’ts)’이라는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지침이 현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때 제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언론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려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감 넘치는데, 그 정의감을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n번방 사건에서 조주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보도들은 ‘의견과 사실을 분리한다’는 객관주의 보도 관행이 어떻게 성폭력 범죄 보도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 나쁜 사

례였지만, 그러한 보도가 나오는 와중에 “가해자에게 서사의 권리를 부여하지 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언론현장의 많은 기자들은 이러한 힘의 충돌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보도인지 우왕좌왕하면서도 길을 찾으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역관계를 둘러싼 모든 것이 그러하겠지만, 성폭력 범죄 보도 역시 ‘말들의 전쟁’이고, 뉴스룸 내부에서도 어떤 단어를 써야할 것인지 기자들 사이에서 토론과 때로는 대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변화를 시도하는 기자들이 쓸 수 있는 지침을 손에 쥐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장하여 어떻게 한국 언론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김수아 선생님은 한국 언론이 성폭력범죄를 보도할 때 구조를 보지 않고, 개인의 일탈을 강조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특히 청년층일 때 미래를 강조하는 보도를 하는데 이것이 한국 사회의 작동구조인 점수 중심의 메리토크라시와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탁월한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프레임과 내러티브는 사회에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메리토크라시에 침윤되어 있는 기자들이 정의감을 갖고 성폭력범죄를 다룰 때 메리토크라시의 승자들, 예컨대 판검사 교수같은 이들도 한순간에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스토리텔링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서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수아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정에서 피의자가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적 발언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같은 것들이 언론 현장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스토리텔링의 구조는 완고하며, 특히 기사의 최종게재에 대해 일선기자들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데스크들이 그러한 스토리텔링에 익숙하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변화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된다면 저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안다고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해오던 대로 보도하는 것이 맞는가 불편해지기는 합니다. 저는 언론인들의 불편한 인식으로부터 변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학계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들, 즉 예컨대 어떤 단어는 쓰지 말아야하며 취재태도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적시에 제공하여, 사후적으로가 아니라 사전 제작과정에서 기자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학계가 해야할 일 중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성폭력범죄 보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칭할 때 통쳐서 ‘언론’이라고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김수아 선생님도 발견하셨듯이, 일부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보도가 나옵니다. 이걸 이미 해당 언론의 뉴스룸에서 집단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잘 하는 언론에게는 힘을 실어주고, 그렇지 못한 언론에게는 변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싸잡아 ‘언론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려는 언론인도 힘 빠지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은 사내에 있는 기자협회, 노조 등에서 이러한 지침을 뉴스룸에 전달하여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자협회, 기자협회, 언론노조 등 기자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이 이러한 지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 강제성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 발언이 무시되지 않는 언론 유관 기관들이 있습니다. 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윤리위원회가 있고, 방송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규제력이 높은 방송심의위가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에도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각 언론사 모두 독자권익위원회,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성폭력범죄 보도에 관한 윤리강령을 강조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선언

적인 것일 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판단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는가는 중요하며, 단 한번이라도 그러한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지침에 바탕한 언급이 있고, 경미하나마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일선 보도에 무시할 수 없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들에 학계가 내놓은 지침들이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디지만 향상되고 있고, 언론사 내부에서도 취재관행이나 기사 스토리텔링들이 변화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오래된 습관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 연구자들이 내놓은 지침들이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수아 선생님의 발표와 같은 연구들이 그러한 지침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지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